광주·전남 취업준비생 토익성적 보니

광주 603점…전국평균 643점·서울 687점
전남 591점으로 10년 연속 전국 꼴찌
취업 잣대 대학생 토익점수 높이기 비상

지역 대학 토익 점수 높이기 고육지책 보니

조선대 '단기 토익 사관학교' 강좌 개설
결석 1일 5만원·지각 시간당 1만원 등 벌금 부과
전남대 교양필수 과목 모의토익점수로 학점 매겨

광주·전남 대학들 눈물겨운 '토익 전쟁'

일정 수준 점수 넘겨야 졸업시험·논문 면제

전공 상관없이 고득점 강요 일부 대학생들 반발도

광주·전남 취업준비생 토익성적이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역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YBM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토익 응시생 중 '취업'이라고 응시목적을 기입한 광주지역 취업준비생 평균 성적은 603점. 전국 평균은 643점, 서울 지역이 687점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점수다. 전남은 10년 연속 꼴찌(2013년 591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토익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공·교양 과목을 신설해 토익 점수를 학점·장학금 등 혜택과 연계하면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다.

조선대 언어교육원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단기 토익 사관학교' 강좌를 개강하면서 결석 1일 5만원, 지각 시간당 1만원, 과제 미수행 문제당 100원의 벌금을 매긴다. 또 강사가 재량으로 휴대전화를 만진 수강생에게 1만원,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해도 2만원을 벌금 체크리스트에 올리기도 한다.

언어교육원은 6주 과정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수강생들에게 30만원씩 예치금을 받아 규율을 모두 지키고 수료하면 30만원을 모두 돌려주고, 해당 규율을 어기면 항목 벌금 액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 김모(28)씨는 "매일 모의토익을 보고 1등부터 320등 꼴등까지 점수와 이름이 붙은 게시판을 보면 마치 학우들이 경쟁상대로 느껴진다"며 "미래를 위해 당연히 공부해야 하고 효율도 인정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을 하다보면 다시 고3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토익 강좌 지도교수 박종철(경영학부)씨는 "개강 5일 전에 벌금 기준을 공지했고, 매주 벌금 내역을 공개해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면서 "무료로 제공하는 수업이라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조선대 경영학부에서는 2011년부터 '경영영어 1·2'를 전공필수 과목으로 도입했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경영학부 1학년은 토익 점수 500점, 3학년은 700점을 넘어야 F학점을 면할 수 있다.

전남대는 올해부터 원어민 교수가 영어회화 수업을 하는 일반교양과목 '생활영어' 대신 모의토익성적으로 학점을 매기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과목을 2013·14학번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교양필수인 이 과목은 강의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2년에 걸쳐 학기당 한차례 모의토익시험을 치르고 그 중 최고점을 학점에 반영한다. 학생들은 토익 점수 ▲750점 이상은 A+ ▲700점~750점 미만 A ▲600점~700점 미만 B+ ▲500점~600점 미만 B ▲500점 미만 C+ 학점을 받게 되며, 응시 여부는 장학금 수혜·졸업 대상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남대·광주대 등에서도 일정 토익 점수를 넘겨야 졸업 시험이나 논문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미(여·전남대 철학과·2년)씨는 신설 과목에 대해 "취업률을 높이려 대학에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은 안다"고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카이스트 영어수업 논란이 연상되는 것처럼 전공에 상관없이 토익 고득점만을 강요하고 취업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문제"라고 밝혔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얼굴 백반증 장애 인정 법원 "국가가 지원해야"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등에 따르면 1991년 충남 보령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모(71)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겨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진단은 백반증이었다.

한씨는 어려운 사정에 일을 계속했지만 병은 더 심해졌다. 야외 활동이 잦으면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2001년 결국 19년을 일한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민박집 단칸방에 세들어 살며 청소일을 도와주고 생계를 이어가던 한씨 2006년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도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 결국 지난 2월 1심 법원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령시가 한씨의 장애등급을 번복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보령시는 바로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1부도 최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양회정씨 자수 "유병언 행적 몰라"

5월 25일 순천서 도주…검찰 양씨 행적 집중 추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전격 자수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후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했다.

자수 의사를 밝힐 당시 양씨는 안성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씨가 자수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인은닉 및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일 동안 유씨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5월 29일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유씨의 도주 차량 EF소타타를 양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앞서 5월 25일 새벽 3시께 유씨가 숨어 있던 별장 인근의 야망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수색 중인 검찰 수사관들을 발견하고 전주로 도주했다.

이후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다른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안성 인근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유씨가 6월 12일 홀로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사망 당시에는 양씨와 따로 떨어져 움직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검찰이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한 5월 25일부터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된 6월 12일까지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전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씨의 부인 유희자(52)씨도 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함께 자수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희자씨를 상대로 도피 경로와 유씨의 사망 전 행적 등에 대해 14시간 넘게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주범이 사망해 처벌가치가 떨어진다며 김씨와 희자씨 등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된 '신엄마' 딸 박수경(34)씨에 대해서는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자수한 양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 유씨와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양씨의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구속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어르신께 드릴 부채 만들어요 29일 광주 북구 운암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방학을 맞은 중학생들이 부채를 만들고 있다. '2014 여름방학 청소년 에듀볼런티어(자원봉사 프로그램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완성된 부채는 북구관내 경로당에 전달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허위 근무일지' 목포해경 경비정장 체포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선체 진입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 구조 활동으로 비난을 샀던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29일 새벽 목포해경 123정 정장 A(53) 경위를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5일 해경의 부실한 구조 활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 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50여일만으로, 목포해경 경비정 탑승자들에 대한 수 차례의 소환 조사도 이미 지난달 이뤄진 상태였다.

A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위를 상대로 근무일지 허위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 치사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과적 화물차 단속 강화 화주·운송업자도 처벌

앞으로 화물차에 기준을 넘겨 짐을 실으면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나 화물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이동 단속 검문소의 수가 지금의 배 가까이로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과적을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검문소를 현재 124곳에서 201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원인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월세 밀린 세입자 물건 파손한 주인

쌍나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파손했다가 경찰서행.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민모(여·46)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A아파트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이모(여·32)씨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간 뒤 책상·의자 등 집기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

○…민씨는 이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현관 손잡이를 부순 뒤 들어가 이 같은 못된 짓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씨가 지난 9개월간 밀린 방값 225만 원을 주지 않자 경고 차원에서 쫓아 갔었다"고 진술.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1582	1	북구 용봉동 1035 중흥아파트 105동 10층 1002호 59.97㎡	아파트	107,000,000 107,000,000	
2014타경 5409	1	서구 풍암동 664-6 동부센트레빌 108동 6층 601호 84.601㎡	아파트	230,000,000 23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2431	1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74-10 539㎡	전	404,250,000 404,250,000	
2014타경 5591	1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380 714㎡[수목매각제외,일부매각외주택,창고등소재로추정됨]	대	41,055,000 41,055,000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2014타경 7214	2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1061 1068㎡[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12,816,000 12,81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7481	1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 397 757㎡	전	8,327,000 8,327,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8. 14.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8. 21.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7.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